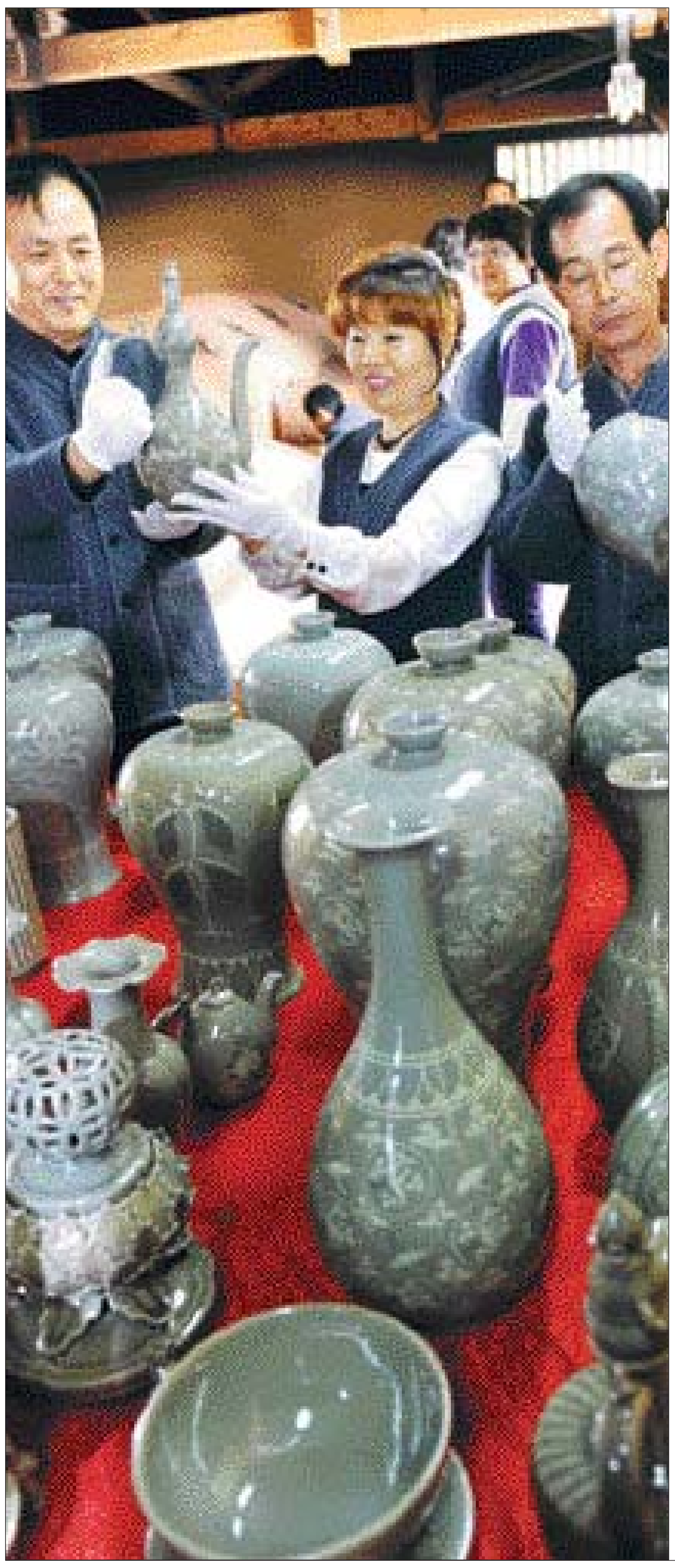

"첨단의료단지, 첨단산단이 최적지"

■전남도·광주시 '공동유치제안서' 용역 보고회

녹지 많고 부지 확보 쉬워 유치 효과
화순 의약 인프라 최대한 활용해야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으로는 광주 첨단산업단지가 최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순의 의약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신약 개발분야에 특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30일 광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제안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이 되는 우수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등에 대한 지역현황과 발전방안이 보고됐다.

용역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와 관련, 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75%가 녹지여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10년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손쉽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첨단산단이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 지역의 의약계열 연구인력(박사)가 인구 1천명당 0.3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인구 1천명당 의사· 한의사수가 전국 2위, 치과의사수 전국 1위로 파악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토 서남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화순지역의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한 백신인프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화순전남대병원, 암센터 등 의약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신약분야를 특화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부터 30년간 5조6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82조 원의 생산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활발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입지선정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4월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입지 분산배치 여부와 입지선정 평가방안을 마련, 오는 6월께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6일 광주시를 방문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적화, 분산배치 여부가 조만간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토연구원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집적화하는 것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을 분리 배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혀 최종 입지선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배치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지역에 대한 점수 배정 등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희망하고 있으므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늦어도 올해 안에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유치 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광주전략산업기획단에 유치제안서 작성 용역을 의뢰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은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의료서비스 자원이 풍부하고, 光·전자·부품 등 첨단산업이 발달돼 있어 의료기기산업과 연계발전이 가능하며, 화순 녹십자 백신공장 등 의약품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분산배치 여부와 입지선정 평가방안을 결정하면 이에 맞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럽 갈 강진청자

강진청자박물관 직원들이 30일 강진군 대구면 청자가마에서 갓 구워낸 청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빚어진 도자기 70여점은 강진군이 주최하는 유럽 순회전시회(5월11일~10월19일)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내복지기금 내달부터 1년간 지출한도 확대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기금의 지출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 최소 2조원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대부만 가능했던 기금 원금의 25%(1조8천억원)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게 되고, 복리후생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당해 출연금(2007년 1조4천억원)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 1천125개 기업에 모두 7조4천억여원이 쌓여 근로자 117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로 기업이 복리후생을 감당할 능력이 축소됐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썼다"며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긴급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의원들 지역현안 머리 맞댄다

내일 회동…F1 지원법·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통과 방안 강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달 1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F1 지원법(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관련 추경 예산 확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달 1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가 배정되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전북을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분리, '5+3 광역경제권' 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수정안 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설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는 방법 등도 논의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고, 이를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에서 지역 의원들이 뒤늦게 만든 대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부 지역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저지 문제와 관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날 회동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F1 지원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문제와 추경 예산안 확보 문제도 집중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F1 지원법을 별다른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F1 경주장 건설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인기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F1 경기장 건설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하는 방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공사 수주 건설업체 워크아웃 대상기업 포함

나주혁신도시 부지 조성 차질 우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에 참여키로 한 건설업체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포함돼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중도건설이 포함됐다. 이 업체는 최근 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3-2(66만4천870㎡), 3-3공구(48만2천559㎡)의 부지 조성 공사를 각각 90억, 81억여원에 따냈다.

그러나 중도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중단결정으로 다음달로 예정된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이 업체가 도시공사와 착공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관계자는 "현재 중도 건설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해당 건설사의 회생이 어려워지거나, 공사 참여가 불가능해질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제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건설사중 광주시와 직접 연관된 사업장은 한국건설의 아파트 3개 단지와 임대아파트 1개 단지 등 1천200여 가구, 임대아파트 1개 단지 216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은 각각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보험이 체결돼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